# 대한민국 구한 '오월 정신'… 이제 헌법 수록으로 답할 때

내란의 밤 광주 시민들 '항쟁의 DNA'로 민주주의 지켜내 광주시. 전국 유일 '헌법수호 비상계엄 무효선언 연석회의' 행동하는 양심 '5·18' 헌법에 새겨 역사 이정표로 삼아야

2024년 12월 3일 밤 대한민국을 집어삼킨 계엄 의 공포 속에서 광주는 유독 남달랐다. 칠흑 같은 어둠이 민주주의를 위협할 때 강기정 시장이 이끈 광주시청의 불은 꺼지지 않았고 5·18을 경험했던 깨어있는 시민의 눈은 더욱 매섭게 빛났다.

12·3 내란 사태 당시 광주시가 보여준 기민한 대 응은 단순한 행정력을 넘어 1980년 5월로부터 이 어져 온 '항쟁의 DNA'가 발현된 결과물이었다.

위기의 순간마다 대한민국을 구한 이 위대한 정 신을 이제는 헌법 전문(前文)에 새겨 불가역적인 역사의 이정표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30분께 윤석열 전 대 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방부의 포고령 이 떨어졌다. 전국의 행정기관이 혼란에 빠진 그 시각 광주시의 시계는 긴박하게 돌아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계엄 선포 30분 만인 밤 11 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전국 행정기관 중 가장 빠른 첫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어 밤 11시 19 분 행정안전부로부터 '청사를 폐쇄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지만, 광주시는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오 히려 청사 문을 활짝 열고 광주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을 불러 모아 단결된 결집을 요청했다.

이튿날인 4일 새벽 0시 11분. 전국에서 유일하게 '헌법수호 비상계엄 무효선언 연석회의'가 광주시 청에서 열렸다. 강기정 시장과 신수정 시의회 의장 과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각 구청장, 5·18 단체 대 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48명이 머리를 맞댔다.

강 시장은 "당시 시장으로서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각오를 했다"고 회고했다. 이들은 오전 1시 10분 공동 담화문을 통해 계엄 무효를 선언했 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가결보다 앞선 시민들 의 주체적인 불복종 선언이었다.

목숨을 건 이날의 행동은 1980년 5월 계엄군의 총칼 앞에서도 주먹밥을 나누며 자치공동체를 실 현했던 그날의 기억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광주 시민들은 본능적으로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 했고, 행정은 이를 뒷받침하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자임했다.

행동하는 양심 광주의 저항 정신은 구호에만 그

치지 않고, 현재까지 구체적인 행동과 제도로 이 어지고 있다. 5·18 당시 시민군이 최후 항전을 벌 였던 전일빌딩245 외벽에는 시시각각 변하는 시 대정신을 담은 대자보가 내걸리며 광주의 메시지 를 전하고 있다.

'광주가 지켜온 민주주의에 내란 선동의 자유는 없습니다' (2025년 2월), '지켰다 민주주의! 고맙 다 광주정신!'(2025년 4월) 등의 문구는 광주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감시자이자 수호자임을 웅 변한다. 최근에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 를 축하하며 5·18의 아픔을 세계적 보편 정신으로 승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기도 했다.

광주시는 이러한 정신을 행정 시스템으로 안착 시키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달 24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마치고 국가 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2·3 내란 당시 영혼 없는 복종이 가져올 파국을 목격했기에 '제2의 내라'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광 주가 먼저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5·18 헌법 수록 12·3 내란을 시민의 힘으로 막 아내면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당위성은 더 욱 명확해졌다. 헌법학계와 지역 사회는 지금이야 말로 개헌의 적기라고 입을 모은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국정 과 제로 확정하고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약속했 다. 개헌 국민투표 시기는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이 거론되지만 비용 절감과 국론 결집 을 위해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 이 1997년 광주 시민의 항쟁을 헌정 질서를 수호 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판결한 점을 들며 "2026년 지방선거가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국민투표의 가 장 효율적인 타이밍"이라고 제언했다.

12·3 사태가 5·18 정신의 현대적 가치를 증명했 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 원 명예교수는 "5·18 정신은 국민이 국가 권력의 단순한 객체가 아닌 주권자로서 국가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저항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시·교육청. 빛의 혁명·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기간 운영

광주시교육청은 '2024년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오는 3~14일 '2025년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동·서부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광주 초중고 전체에 '2025년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기 간 운영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학교 현장에서 관 련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권장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현수막

게시, 사회·도덕·역사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과 연계한 계기교육, 토론·캠페인·자치활동 중심 프로그램, 헌법 수호 실천 다짐 작성, 헌법 필사 등 이다.

광주시도 1일부터 12일까지를 '빛의 혁명, 민주 주의 주간'으로 선포하고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대규모 시민 참여 프로그램 을 운영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光 州日報 汽

비상계엄에 민주주의 멈췄다

호외

## 光则日報為

호외

## 윤석열 탄핵 … 국민이 이겼다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탄핵' 호외

이재명 대표 "위헌적 비상계엄선포…국민 여러분 국회로" 한동훈 대표 "비상계엄은 잘못된것…국민과 함께 막겠다" 조국 대표 "국민 용인안해"…우원식 의장 "헌법따라 조치"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 호외

## 계엄의 진실, 광주가 말했다…세계가 주목한 광주일보 보도

세계 주요 언론, 80년 5월 아픔 안고 있는 '광주'의 신문에 관심 아사히 신문, 본사 찾아 계엄부터 탄핵까지 '호외' 전 과정 취재 마이니치·도쿄·서일본신문·NHK 취재진, 5·18 연계 입체적 조명

1년 전 세계 주요 외신은 12·3 불법계엄 사태를 실시간으로 타전하며 대서특필했다.

광주일보는 계엄군이 들이닥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지난해 12·3 계엄 당시 일사불란하게 호외를 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1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세 계 주요 언론은 80년 5월 계엄의 아픔을 안고 있는 광주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 주요 일간지인 아사히 신문은 지난달 20일 광주일보를 찾아 지난해 12·3 계엄부터 대통령 탄 핵까지 호외를 만들며 보도한 전 과정을 취재했

아사히 신문과 함께 일본 3대 신문의 하나로 꼽 히는 마이니치 신문과 도쿄·서일본신문, NHK 취 재진 등은 그동안 광주일보를 찾아 '12.3 비상계 엄 사태'와 이를 5·18과 연계해 입체적으로 조명

한 과정을 취재했다.

취재진은 광주일보 기자들을 만나 계엄 당시 긴 박했던 호외 제작과 이후 대통령 탄핵과 파면, 그 리고 조기 대선까지 지역의 여론 흐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취재했다. 각 언론사는 대한민국 계엄 을 다룬 특집 기사를 준비하며 호남에서는 광주일 보를 가장 먼저 찾곤 했다. 외신들은 한국 내 극단 적인 정치적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 이후 갈등 통합의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카이세 아키히코 아사히 신문 서울지국장은 광 주일보를 찾아 "계엄 1년을 맞아 특집 기획을 준비 하면서 5·18민주화운동으로 계엄의 상처를 안고 있는 광주 시민사회가 한국 정치에 대해 어떤 인식 을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역 대표 신문 광주일보 를 찾았다"며 "시민의 힘으로 계엄을 좌절시킨 일

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NHK 취재진은 비상계엄부터 탄핵 과정을 담은 광주일보 호외 등을 접한 뒤 '역사를 아는 지방지' 라고 평가했다.

후쿠오카 시즈야 마이니치 신문 서울 지국장은 지난 2월 광주일보를 찾아 호외 발행 과정과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 '조기 대선' 전 망 등을 취재한 뒤 특별 기고를 본보에 싣기도 했 다. 서일본신문(니시닛폰신문)과 도쿄신문 취재 진은 1980년 5월 광주일보 기자들의 사직서 제출 과 '비상계엄에 민주주의 멈췄다'라는 제목을 단 호외 제작을 '신문의 존재 가치와 기자정신'을 보 여준 사례라고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올해 45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운동과 광 주시민들의 지난해 12·3 계엄에 대한 반응 등을 집 중적으로 조명했다. 1980년 5월 당시 제작됐던 광 주일보 신문도 이들의 중요한 취재 대상이 됐다. 외신 취재진은 5·18 당시 광주일보에 관한 계엄군 의 기사 검열·삭제 흔적과 '아 광주여', '무등산은 알고 있다' 등의 기사를 들여다봤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공고

-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 1. 발전사업개요
- 발전소명 : 영암나눔태양광1호 태양광발전소 발전소위치 : 전라남도 영암군 시종면 원항리 1801 외 30필지(총 31필지) • 발전소 면적 : 154,370.8㎡
- 2. 발전사업의 주요내용 발전용량 :26,000[kW]
- 사업개시예정일 : 2028년 11월 이후 사업운영기간 : 2028.11.01.- 2048.10.31.(20년)
- 3.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 주식회사 영암나눔태양광 대표이사 김도열
- 4. 주민의견 제출
- 기 간: 2025.12.02.-2025.12.10.(7일) • 의견제출방법 - 전화: 02-6251-8012 - 팩스: 02-6251-7777
- E-Mail: srkim@soulenergy.co.kr
- ※ 해당 사업 관련 자료열람을 원하시는 경우.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료열람을 하실 수 있으시며 이동이 불편하 신 경우 저희가 직접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공고

- 발전소명: 영암나눔태양광2호 태양광발전소 • 발전소 위치 : 전라남도 영암군 시종면 원항리 1684 외 41필지(총 42필지)
- 발전소 면적 : 203,222.3㎡ 2. 발전사업의 주요내용 • 발전용량 :34.000[kW]
- 사업개시예정일 : 2028년 11월 이후 • 사업운영기간 : 2028.11.01.- 2048.10.31. (20년)
- 주식회사 영암나눔태양광 대표이사 김도열
- 4. 주민의견 제출
- •기간: 2025.12.02.-2025.12.10.(7일) • 의견제출방법 - 전화: 02-6251-8012 - 팩스:02-6251-7777 - E-Mail: srkim@soulenergy.co.kr
- ※ 해당 사업 관련 자료열람을 원하시는 경우,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료열람을 하실 수 있으시며 이동이 불편히 신 경우 저희가 직접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光则日報

kwangju.co.kr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 

##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5년 12월 01일 당 회사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에서 해산결의 되 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과 이 해관계가 있는 분은 2026년 02월 09 일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 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 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 합니다.

> 2025년 12월 02일 주식회사 참진바이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08, 4층(쌍촌동) 청산인 박진주

## 의료빌딩 급매 (7층)

병,의원 최고. 대지 848.5㎡ 건물 3,846㎡ (소이청소년과 마취통증과 약국 성업중)

현재 월 3천 1백. 수익률 *7*% 매 69억 9천. 인수가 17억

군산중심대로. 롯데마트 앞.

주인직 010-3646-8700

# 받은 돈 회수

##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가 직접 관리합니다.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 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010-2785-0073 062)521-4109

